

# 격동기의 노사관계, 새로운 노동체제 모색

조 성 재\*

민주주의는 기본권 보장이나 형식과 절차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기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대다수는 노동자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우리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직후인 7, 8, 9월에 전국적으로 노동자대투쟁이 발생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이 곧 노동운동과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억압이었음을 사후적으로 깨달았다. 그렇게 민주주의의 진전을 배경으로 1987년 노동체제가 성립되었지만, 이후 30여년 동안 노동운동은 부침을 거듭하고, 특히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는 양극화로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게 되었다. 심지어 절차적 민주주의나 기본권 보장조차 후퇴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결국 촛불 혁명을 통하여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 반노동적 정책들을 뒤집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점에서 민주주의를 통한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노동존중사회” 구현 정책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변화는 2017년 노사관계를 이해하는 키워드이다. 이미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된 2016년 말부터 새로운 노사관계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2대 지침의 폐기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의 철회를 넘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단행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고조에 오른 노정 대립과 갈등은 노정간의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대화와 협의로 대체되었다. 관료들의 행정지도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느껴졌으며, 이와 동시에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줄어들고 각종 현안에 대한 성명전조차 조심스럽게 전개되었다. 변화는 그렇게 곳곳에서 감지되었는데, 그에 조용하여 노동계는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설립과 일자리 관련 노사정 공동선언 성사 등으로 화답하였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2003년 참여정부 1년차와 달리 안정적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단적인 지표이다.

그러나 아직 열매는 물론이거니와 줄기조차 제대로 숙성하지 못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chosj@kli.re.kr).

위한 노사정 주체들의 노력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그러한 점에서 2018년은 이 같은 노력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기로가 될 전망이다.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노동계의 기대감, 그렇지만 기존 관성을 쉽게 벗어던질 수 없는 사용자들의 유·무형의 저항, 그리고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까지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장애 요소들은 널려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완벽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구사될 것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다. 과연 정부의 시행착오가 있을 때 노와 사가 건전한 비판과 올바른 방향으로의 견인을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 지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어느 때보다 노사정 간의 협주행동을 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이 요구되고 있지만, 주체들의 여건과 정치경제적 환경은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는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2016년 말 이후 격동의 시대에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분석 및 평가할 수 있으며, 2018년 이후 노사관계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글들을 모았다. 총론과 더불어 공공, 금속, 보건의료, 건설, 비정규직 주체들을 다루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동시에 주체들 사이의 고질적 불신과 어려운 환경으로 인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현명한 판단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의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노사관계의 관행 정립과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출발점인 2017년을 우리는 새로운 노동체제의 원년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KLI**